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도민일보	02면	'숨은 일꾼' 자원봉사자 한자리 노고 격려	1
江原日報	27면	“자원봉사자 다함께 힘모아 강원특별자치시대 앞장”	2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취약계층에 연탄·생필품 전달	2
江原日報	03면	자치도의회 사랑의 연탄 배달	3
이뉴스투데이	온라인	강원도의회, 춘천서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4
뉴스라이트	온라인	2023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랑...	5
江原日報	27면	“기독교계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힘모은다”	6
강원도민일보	20면	강기총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 염원 동참	6
江原日報		횡성 이모빌리티 연구.실증 단지 착공 눈길[1/2]	7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회, 다음 달 강원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9
강원도민일보		도의회 예결특위 4일부터 예산 심사	10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도의회 예결특위 4일부터 예산 심사	10
연합뉴스		강원자치도의회 예결특위, 내달 4일부터 2024년 예산안 심...	11
MBC 강원영동	온라인	교육청 전자철판 예산 전액 삭감	12
江原日報		“지자체, 시멘트사·주민 상생방안 고심해야”	13
강원도민일보		도의회 연구용역 보고회	13
누리일보	온라인	강원자치도의회'시멘트 공장지역 환경과 주민건강 연구회'	14
江原日報	05면	재판받으러 차 타고 3~4시간 영동권 청소년들 ‘춘천 원정’	15
江原日報	03면	국민의힘 자치도당 공약개발단 구성	16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심오섭 도의회 사회문화부위원장	16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16
강원도민일보	13면	[동정] 심오섭(왼쪽)·박호균(강릉) 도의원	17
강원도민일보	18면	[동정]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17
강원도민일보	18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17
江原日報	01면	올해 동해서만 '84차례' 흔들 강원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18
江原日報	05면	건축물 10곳중 9곳 '내진설계 안돼' 지진 무방비	19
江原日報	01면	전기·수도료도 못 내... 벼랑 끝 서민경제	19

강원도민일보	01면	동해 항만산업은 순항 바다까지 가는 길 난항	20
강원도민일보	11면	학곡지구 초교 '주민 개방형 복합시설' 조성	21
강원도민일보	13면	강릉 7개 중기 옥계항서 첫 러시아 수출길	21
강원도민일보	14면	태백형 산림·목재 일자리 모델 개발한다	22
江原日報	02면	영월~삼척 고속道 인근 개발 러시	22
江原日報	01면	영하 10도 뚝 ... 칼바람·한파로 문 여는 12월	2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동해안 '여행 쓰레기' 장기 대책 필요	2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철도공단 백마고지역 재개 약속 지켜야	25
江原日報	25면	[사설]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 실질적 대책 강구해야	26
江原日報	25면	[사설] 외국인 근로자 체계적 관리, 더 이상 미뤄선 안돼	27

강원도민일보

2023 12 01 ()

02



2023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30일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김진태 도지사와 권혁열 도의장 등을 비롯해 도내 18개 시·군 자원봉사자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구정민

‘숨은 일꾼’ 자원봉사자 한자리 노고 격려

도자원봉사자대회 유공자 시상

2023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30일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도내 18개 시·군 자원봉사자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도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김진태 도지사와 권혁열 도의장, 박광구 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박상수 삼척시장, 이상호 태백시장, 정정순 삼척시의장, 심재섭 영월군의장, 심영근·조성운 도의원, 박용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18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장, 자

원봉사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비전 퍼포먼스 등을 통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을 포함한 강원 자원봉사활성화를 다짐했다.

이날 자원봉사누적 시간 1만 시간이 상이 된 개인봉사자 11명이 명장 표창을 받았고, 올해 자원봉사 유공 수상자로 선정된 234명(단체 포함) 가운데 68명이 대표로 도지사와 도의장, 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 등을 수상했다.

구정민 koo@kado.net

“자원봉사자 다함께 힘모아 강원특별자치시대 앞장”

강원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 참석서 개최
건강한 봉사 문화 선도 유공자·단체 시상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2023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가 지난 30일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새로운 강원 자원봉사 중심 특별자치시대’를 주제로 한 이날 대회는 이덕하 도자원봉사센터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돌아보는 영상과 함께 건강한 봉사 문화를 선도하는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

도지사상에는 김태은, 김보선, 안광혁씨 등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117명, 공무원 6명, 센터 관리자 4명, 자원봉사 30개 단체, 고성군, 강릉시, 삼척시와 자원봉사 명장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홍, 임정희, 이상훈, 이명철씨 등 7명과 3개의 단체에는 도의회의장상이 돌아갔다.

행사장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진행한 자원봉사 활동 사진을 정리한 전시 부스가 운영됐고, 너른마당풍물패, 이사부무용단의 축하 무대 등도 화려하게 펼쳐졌다.

김진태 도지사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등 국제행사 성공 개최에 기여해주신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와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박광구)는 지난 30일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2023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 도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랑스러운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원봉사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광구 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센터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풀어나가며 자원봉사 중심의 강원특별자치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권혁열 도의장, 박상수 삼척시장, 정정순 삼척시의장을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 자원봉사자 900여명이 참석했다.

김민희기자 minimi@

강원도민일보

2023 12 01 ()

03



도의회, 취약계층에 연탄·생필품 전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30일 춘천연탄은행 밥상공동체(대표 정해창)를 통해 춘천 소양동 일대 취약계층 10여곳에 연탄 5000장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유희태

江原日報

2023 12 01 ()

03



자치도의회 사랑의 연탄 배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지난 30일 춘천시 소양동 일대 저소득층 가정에 사랑의 연탄 2,000장과 쌀,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봉사활동을 벌였다. 박승선기자

2023 11 30 ()

이뉴스투데이

강원도의의회, 춘천시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김경석 기자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모습.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김경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는 30일 춘천시 소양동 일원에서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사)춘천연탄은행 밥상공동체(대표 정해창)를 통해 취약계층 10여곳을 선정해 진행했다.

이날 도의회와 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은 2000장의 연탄과 쌀·라면 등 생필품을 손수 가정에 직접 배달하고 나머지 3000개는 단체에 기부했다.

정해창 밥상공동체 대표는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을 기증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권혁열 의장은 "오늘 하루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석 기자 ks191212@naver.com

2023 11 30 ()

2023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사랑의 연탄기증으로 이웃사랑 실천!

한경준 기자 ppc99kr@hanmail.net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는 11월 30일 춘천 소양동 일대에서 개최된 2023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행사를 통해 저소득층 이웃 가정에 연탄을 배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사단법인 춘천연탄은행 밥상공동체(대표 정해창)를 통해 춘천 소양동 일대 취약계층 10여곳을 선정해 진행했다.

- 본 행사에 참여한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100여명은 2,000장의 연탄을 손수 가정에 직접 배달하며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아울러, 쌀·라면 등 생필품도 함께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한편, 현장을 방문한 정해창 춘천연탄은행 밥상공동체 대표는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을 기증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권혁열 의장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연탄을 난방으로 사용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으며, 그들에게 연탄은 겨울철에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이다.”며 “오늘 하루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 12 01 ()

江原日報

“기독교계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힘모은다”²⁷강기총 미션 2024 전국대회
강원기독교인 대상 시상

도내 기독교인들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강원특별자치도기독교총연합회(이하 강기총)는 지난 30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미션 2024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양명환 강기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션 2024 전국대회 개최 예배를 시작으로 성공 개최 캠페인을 위한 축하 공연, 자랑스러운 강원기독교인 대상 시상, 미션 2024 결의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강기총 사무총장인 유화중



◇강원특별자치도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30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미션2024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목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도내 18개 시·군 연대 홍보사진 찍기, 전국 10만명 홍보대사 모집, 100만명 홍보 캠페인 등 미션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은 성공 개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또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목회자 부문, 김범일 세계가나안운동 명예총재가 평신도 부문으로 강원기독교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는 잠언 16장 3절과 같이 50일 남은 만큼 올림픽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양명환 회장은 “참여해주신 기독교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올림픽이 성공하도록 여기 계신 참석자들이 많이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강기총은 1일 인터불고 원주에서 전국교회 연석회의를 진행한다. 원주=김인규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2 01 ()

20

강기총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 염원 동참

청소년올림픽 미션 전국대회 개최
전국 10만명 홍보대사 모집 전개
이철·김범일 강원기독교인대상 수상

강원기독교총연합회(이하 강기총)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전국 기독교연합회 차원의 동참을 결의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미션 2024 전국대회가 30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강기총 주최, 강원특별자치도 후원으로 열렸다.

행사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양명환 강기총 대표회장,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



강원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원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미션 2024 전국대회가 30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열렸다.

장단, 도내 18개 시·군 기독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중우 총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동호 황성기독교총연합회장이 대표로 나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대회 성공을 위한

최선의 협력, 선교올림픽을 위한 기도 와 참여 등을 다짐했다. 강기총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도내 18개 시·군 연대 홍보사진찍기, 전국 10만명 홍보대사 모집 및 100만명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날 제1회 강원기독교인대상 시상식

이함께 개최,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과 김범일 세계가나안운동 명예총재가 상을 받았다.

양명환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함께하신 17개 광역시·도 회장단, 도내 회장단께 감사하다”며 “기도하는 올림픽, 선교하는 올림픽, 그리고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을 위해 모여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왔다. 수상하신 분들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인사했다.

신경호 도교육감도 “2만5000명의 강원 교육가족, 16만의 학생들과 함께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권해민

2023 11 30 ()

江原日報

횡성 이모빌리티 연구·실증 단지 착공 눈길

목계리 일원 29만m² 부지에 5개 센터 및 장비 등 구축
1,289억 투입.. 강원 미래차 산업 핵심 거점 조성 시작



횡성을 목계리에 들어설 '이모빌리티 연구·실증 단지' 착공식이 지난 30일 목계리 133 일원 부지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횡성을 목계리에 들어설 '이모빌리티 연구·실증 단지' 착공식이 지난 30일 목계리 133 일원 부지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횡성을 목계리에 들어설 '이모빌리티 연구·실증 단지' 착공식이 지난 30일 목계리 133 일원 부지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횡성을 목계리에 들어설 '이모빌리티 연구·실증 단지' 착공식이 지난 30일 목계리 133 일원 부지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횡성을 목계리에 들어설 '이모빌리티 연구·실증 단지' 착공식이 지난 30일 목계리 133 일원 부지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옛 군부대 건물 철거 퍼포먼스를 했다.

횡성군 횡성을 목계리에 들어설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가 첫삽을 뚫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횡성군은 지난 30일 횡성을 목계리 133 일원 '이모빌리티 연구·실증 단지'부지에서 김진태 지사, 유상범 국회의원,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 조창진 민주평통 강원부의장, 이주만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경중 송호대 총장, 한태용 강릉원주대부총장 등 기관단체장과 목계리 이장 및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가졌다.

이모빌리티 연구·실증 단지는 1,289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29만㎡에 조성되는 강원 미래차 산업의 핵심이다. 이날 착공한 기업지원센터와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를 비롯해 2024년 첫 삽을 뜰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차량 운전능력 평가센터,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평가센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등 모두 5개 실증·지원센터가 들어선다. AI 운전능력평가 표준화 플랫폼 장비도 구축된다.

기업지원센터 및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지원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도내 기업은 물론 전국적인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진태 지사는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가 조성되면 강원 미래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횡성군이 이모빌리티 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회의원은 "한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라는 징키즈칸의 말처럼 횡성군민 모두가 함께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모빌리티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기 군수는 "횡성의 미래 성장동력인 이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인 연구·실증단지 착공으로 한걸음 더 미래로 나가게 됐고, 국·도비를 확보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3 11 30 ()

강원도의회, 다음 달 강원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강원도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 달(12월) 1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 규모는 7조 5,800억 원, 강원도교육청은 3조 9,700억 원입니다.

기금은 강원도가 1조 700억 원, 도교육청은 1조 8,400억 원 수준입니다.

강원도의회는 다음 달 4일부터 나흘간 강원도 예산안을, 이후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도교육청 예산안을 각각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가 끝난 예산안은 15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박성은

강원도민일보

2023 12 01 ()

도의회 예결특위 4일부터 예산 심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무철)가 오는 4일부터 2023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은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심사할 계획이다. 강원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은 7조5862억원, 기금

은 1조729억원이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은 3조9709억원, 기금은 1조8478억원 규모다.

이무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세수 감소가 예상돼 도 자체사업을 22.9% 삭감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예산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과소 계상된 부분이 없는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설화

강원도민일보

2023 12 01 ()

도의회 예결특위 4일부터 예산 심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무철)가 오는 4일부터 2023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은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심사할 계획이다. 강원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은 7조5862억원, 기금은 1조729억원이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은 3조9709억 원, 기금은 1조8478억원 규모다.

이무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세수 감소가 예상돼 도 자체사업을 22.9% 삭감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예산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과소 계상된 부분이 없는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설화



2023 11 30 ()

강원자치도의의회 예결특위, 내달 4일부터 2024년 예산안 심사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강원도 예산안은 4~7일 나흘간, 도교육청 예산안은 11~13일 사흘간 들여다본다.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은 각각 7조5천862억원과 1조729억원이다.

도교육청이 낸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은 각각 3조9천709억원과 1조8천478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예비 심사를 마친 7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이날 안건을 넘겨받았다.

이무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세 감소로 인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칫 민생예산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이 과소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절감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2023 11 30 ()

MBC 강원영동

교육청 전자철판 예산 전액 삭감

김인성

강원도교육청이 편성한 전자철판 예산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각종 의혹과 논란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자
도의회가 제동을 건 겁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 가운데
24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IN
학교전자철판 지원 155억 원,
춘천고에 지을 학생독립운동기념관 34억 원,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26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스마트기기 지원 예산과 경영정책 추진 예산은 일부 삭감했습니다.
OUT

특히 강원도교육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전자철판 예산을 모조리 깎았습니다.

전자철판 사업은
몇몇 특정 업체 몰아주기 아니냐는 특혜 의혹과 교육청 특정인에 의한 행정 파행 논란 등
각종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감사원도 교육청을 두 번 방문해
전자철판 관련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는 감사원 판단을 본 뒤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진 의원 /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재 교육부, 감사원에 조사 자료가 제출돼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청이 입장표명을
하고 난 후에, 추후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
예산 삭감은 당연한 일이라며, 교육청은
이제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예산 전액 삭감에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박세민 대변인 / 강원도 교육청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하여 내년에도 전자 철판 보급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살아날 수 있을지는
다음 주 예결특위를 거쳐
2주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각종 의혹과 논란에도, 교육청이 곳곳하게 추진했던 핵심 사업 예산이 삭감되며, 향후 교육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전자철판#강원도의회#전액삭감

2023 12 01 ()

江原日報

“지자체, 시멘트사·주민 상생방안 고심해야”

자치도의회 정책연구회 주최
‘공장지역 건강 용역’ 보고회
“악취 등 환경 민원 대책 시급”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악취 등 환경오염에 노출돼 있는 만큼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책연구모임인 시멘트 공장지역 환경과 주민건강 연구회는 지난 3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시멘트 공장지역 환경과 주민건강 연구회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박준석 강원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최

근 들어 시멘트 및 석회 제조사업장에서 악취 원인물질이 발생돼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민원 문제와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했다. 또 “환경부가 지난 9월부터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 9개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에 대해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환경부 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주민들의 피해 보상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교수는 기업만을 옥죄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보편타당한 환경관리 법규를 만들고 지자체는 시멘트 제조사와 지역 주민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멘트 제조사는 법규

를 지키고 주민은 시멘트 제조업이 지역의 중요 사업체임을 이해하고 상생 방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장 주변 대기질 조사 현황, 순환자원의 활용, 공장 주변 환경오염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환경오염 저감 방안을 찾기 위해 추진됐다. 또 타지자체 정책을 분석해 지역사회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회 회장인 김기하(국민의힘·동해) 도의원은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지역기업과 주민들의 상생 방안을 도출, 도내 시멘트 주변지역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2 01 ()



도의회 연구용역 보고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시멘트 공장지역 환경과 주민건강 연구회’가 3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시멘트회사와 주민 상생에 대한 우수 사례 및 정책 연구용역’ (박준석 강원대 교수)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사진제공=도의회

2023 11 30 ()

강원자치도의회 '시멘트 공장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 연구회'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책연구 모임인 '시멘트 공장지역 환경과 주민건강 연구회'는 11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시멘트 공장지역 환경과 주민건강 연구회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장주변 대기질 조사현황, 순환자원의 활용, 공장주변 환경오염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환경오염 저감 방안을 강구하기위해 추진됐다.

또한 관련 제도적 사회적 쟁점 및 타지자체 정책들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용역이 진행됐다.강원

이 날 보고회는 연구회장인 김기하 의원 외 7명의 연구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결과보고 후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회 회장인 김기하 의원은 “배출기준 점검 등 지역 환경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반영해달라고 연구용역 초기에 강조했었고, 지역기업과 주민들의 상생 방안을 도출하여 도내 시멘트 주변지역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江原日報

2023 12 01 ()

05

재판받으러 차 타고 3~4시간 영동권 청소년들 ‘춘천 원정’

강릉지원 소년부 설치 목소리
차선택 ‘찾아가는 법정’ 재개

지난달 2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216호 법정. 강릉, 고성, 동해, 삼척, 속초 등 영동권에 거주하는 19명의 보호 소년(보호 처분에 의해 송치된 소년)들이 나왔다. 춘천지법 소년재판부 이경은 부장판사 심리로 소년 재판이 진행됐지만 이는 ‘예외적인 일’일 뿐이다.

평상시 영동권 청소년들은 3~4시간씩 차를 타고 춘천지법 본원까지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강릉지원에는 소년부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철 태풍이 북상하던 시기에 춘천지법 소년재판부는 춘천까지 재판을 받으러 오는 영동권 청소년들의 안전을 걱정해야 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소년부 설치가 필요하

다는 목소리가 수년째 나오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춘천지법은 2013년부터 차선택으로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열고 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인 올해 다시 열렸다.

영동권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꾸준히 개선됐다.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해 개인채무자의 소재지가 동해안 6개 시·군인 경우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강릉지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소년 재판 만큼은 제자리다.

변호사인 임미선 강원특별자치도 의원은 “강릉지원에서 소년 보호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2023 12 01 ()

江原日報

03

국민의힘 자치도당 공약개발단 구성

단장에 박정하 도당위원장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내년 4·10 총선 승리와 공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도당 공약개발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도당은 기존 운영해 오던 '일편도심 총선거확단'과 병합,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하고 정책정당 이미지를 구현하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공약개발단 단장은 박정하(원주갑·사진) 도당위원장, 부단장은 김길수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선임됐다. 실무책임은 김도윤 사무부처장이 맡고 윤미경 도당 사무처장은 공약 개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도당 총선거확단은 전국 17시·도 중 가장 먼저 출범해 도(道) 발전에 걸림돌을 제거할 정책과제 발굴에 집중

해 왔다. 12월 중 지역·선거구별 공약 제시를 목표로 활동하며 지역 순회 연석회의를 개최, 여론 수렴에 나섰다.

도당 공약개발단은 △지역발전 및 숙원사업 △SOC 확충 등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일자리 △복지 등 크게 4개 분야 공약을 발굴한다. 이를 중앙당과 협의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현정기자 together@

2023 11 30 ()

江原日報

[동정] 심오섭 도의회 사회문화부위원장

심오섭 도의회 사회문화부위원장은 1일 오전 10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리는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

2023 11 30 ()

江原日報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1일 오전 10시 고성 오호항 항구 일원에서 열리는 2023년 오호항 도루묵구이 체험 행사에 참석.

이무철(춘천) 도의회 경제산업부위원장은 2일 오후 4시 KBS춘천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열리는 소양강댐 수물민 56년 회한의 아리랑 공연에 참석.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1일 오후 3시30분 속초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미래무형문화유산 '속초 돈돌라리'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

박호균(강릉) 도의원은 1일 오후 6시30분 세인트컨벤션홀 2층에서 열리는 강릉예술인상 시상식 및 예술인의 밤에 참석.

이한영(태백) 도의원은 1일 오후 6시 태백 황지연못 내 피아노무대 일원에서 열리는 제31회 태백산눈축제 별빛페스티벌 점등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12 01 ()

13

예술인상 시상식 및 예술인의 밤에 참석한다.



심오섭(왼쪽)·박호균
(강릉) 도의원은 1일
오후 6시 30분 강릉 세
인트컨벤션홀 2층에서
열리는 제30회 강릉

강원도민일보

2023 12 01 ()

18



김용복(고
성) 도의
회 농림수
산위원장은 1일 오후
10시 고성 오호항
항구에서 열리는
2023년 오호항 도루
묵구이 체험 행사에 참
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01 ()

18



강정호(속
초) 도의
원은 1일
오후 3시
30분 속초
문화예술회관 소강당
에서 열리는 미래무형
문화유산 '속초 돈돌
라리' 학술 심포지엄
에 참석한다.

2023 12 01 ()

江原日報

01

올해 동해서만 '84차례' 흔들 강원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2020년 45건 → 올해 들어 113건
강도도 세져 선제적 대비 시급
경주 지진 영향 불안감 확산

지난 30일 새벽 4시55분 경상북도 경주에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5면

강원자치도 내에서는 올해 동해안 인근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상청 집계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해 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강원도 내 지진은 2020년 45건, 2021년 46건, 2022년 49건이었다.

하지만 올 1월부터 11월30일까지 지난해 2.3배에 달하는 113건의 지진이 발생했다.

특히 동해 지역에 지진이 집중되며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동해안 인근 지역에서 관측된 지진은 84회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발생한 51회보다도 많았다.

이 중 '진도 2' 이상은 20회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집계된 13건의 약 1.5배를 기록했다.



특히 올 5월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경주 지진을 계기로 강원자치도 내 지진 대비 인프라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교육과 그동안 수립한 계획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경남 강원연구원 박사는 “동해안의 경우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해일로 연결될 위험이 있음에도 대피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는 실제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수립한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서화기자

2023 12 01 ()

05

江原日報

건축물 10곳중 9곳 '내진설계 안돼' 지진 무방비

강원 '안전지대 아니다'

지난 30일 새벽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하고 울릉도 동해안을 비롯, 전국적으로 지진이 잇따르고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 내 건축물 대다수가 사실상 무방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동 중 9동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았으며 공공건물보다도 민간건물이 지진에 더욱 취약,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진 설계 안 된 건물=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내진설계 12.9% 불과
민간 건축물 더 취약

경주 지진 새벽 재난문자

"왜 강원까지" 불만 속출

기상청 "규정상 전국민 발송"

(춘천갑) 국회의원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6.4%였지만 도 내 내진설계 건물은 12.9%에 불과

했다. 이는 충북(14.7%), 전북(13.6%) 등 강원자치도와 여건이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강원자치도 내 공공건축물의 경우 2만7,932동 중 3,540동에 내진설비가 갖춰져 22.5%의 내진율을 보였지만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12.4%에 불과,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2017년 12월 이전 건축 건물은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허영 의원은 "한반도의 경우 규모 5.0 이상의 역대 지진 10건 중 7건이

2000년대 이후, 5건이 2010년대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다 실효적인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벽잠 깨운 재난문자=이날 새벽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하면서 새벽 시간에 강원자치도 및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며 "재난문자 때문에 잠깨 놀라 강제 기상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진동조차 못 느낀 지역까지 재난문자를 보낸 것은 과하다는 불평이다.

춘천에 거주하는 이모(56)씨는

"새벽에 요란한 알람이 울려 너무 놀랐다"며 "진동도 못 느꼈는데 왜 강원도까지 문자를 발송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재난문자 규정에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국에 재난문자를 보내게 돼 있다"며 "이번 지진의 경우 강원도에서는 진동이 감지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재난문자를 수신했을 경우 대피할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서희기자 wiretheasia@kwnews.co.kr

2023 12 01 ()

01

江原日報

전기·수도료도 못 내... 벼랑 끝 서민경제

도내 공공요금 체납 급증

불황의 그림자가 덮치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서민 가계가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 일상적으로 내던 공공요금조차 납부하지 못해 체납액이 치솟는 실정이다.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도내 1만1,456가구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했다.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44억8,371만원이었

전기료 석 달 이상 연체 1만1천여가구·44억... 5년 사이 최대
수도요금 미수금도 심각... 원주·강릉 10월 기준 전년比 7배
가스요금 미납도 지난해 기점 증가세... 대출 연체율도 급증

다. 연말까지 한 달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지난해 전체 체납가구 수(9,903가구)를 15.7%, 체납액(37억3,720만원)을 20% 초과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다.

도시가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도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A업체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3개월 이상 밀린 체납액은 3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억8,400만원)보다 소폭 줄었지만 2021년 9월(3억1,800만원)과 비교하면 12.9% 증가했다. A업체의 도시가스요금 체납액은 2020년 3억7,000만원에서

2021년 3억1,800만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전력 강원본부 관계자는 "요금 인상과 겹쳐 2020년부터 체납금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요금 미수금 증가 폭은 무서울 정도다. 원주시 집계 결과 10월 말 기준 원주지역 상수도요금 미수액은 8억1,728만원으로 지난해 동월(1억293만원)보다 7.9배 늘었다. 강릉지역 수도요금 미수액은 10월 기준 지난해 2,940만원에서 올해 2억904만원으로 7.1배가 됐다.

확박한 살림에 이자 상황마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9월 말) 기준 도내 가계대출 연체율은 0.17%로 전년 동기(0.12%) 대비 0.05%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13%에서 0.31%로 2배 이상 급등했다.

도내 한 지자체 수도요금 담당자는 "수도세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가 체납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11월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단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분할납부 등 위기 가구를 위한 정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2023 12 01 ()

강원도민일보

01

동해 항만산업은 순항 바다까지 가는 길 난항

동해신항 국비 260억원 반영
옥계항 러시아 첫 수출품 선적
동해선·평택~삼척 고속도 등
물류교통망 경제성 지표에 발목

동해신항부두 개발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되고, 강릉 옥계항을 통해 러시아로의 첫 수출물품 선적이 이뤄지는 등 강원형 항만산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항만 물류 거점지 확보를 위한 영동권 SOC 인프라 완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원항만은 동해항을 중심으로 국제해운항로 개설을 통한 다목적 항만으로의 전환을 꾀했음에도 실적 미비, 민간투자 저조 등 항만배후단지 개발 제약 등 한계에 부딪혀 항만 물류 인프라 조성 병행과 함께 강원특별법 후속 개정에 항만 특례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동해 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항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체선 문제 해소와 신규화물 수요 등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동해신항 개발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특히, 정부 재정투자 부도로 전환된 2·3번 선석에 대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260억원이 반영, 국회 예산심의회에서 해당 예산안이 최종 확

정되면 내년 중 실시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는 30일 옥계항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하는 첫 수출물품을 선적하는 등 무역항으로의 역할을 재모색하고 있다.

이같이 동해항·옥계항을 중심으로 항만산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항만 물류 인프라 조기 조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SOC 사업은 경제성 지표에 발목이 잡혀 조기 추진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강원형 항만산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동해선·삼척~강릉 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을 비롯해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등과 연계 가능한 동해북부선 철도 및 평택~제천~삼척을 잇는 고속도로, 부산~포항~삼척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철도 등 항만 물류 교통망 확충이 완성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삼척~강릉 고속화철도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을 가늠하는 경제성 지표가 다소 낮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 균형발전 등 정책적 논리개발 선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동해북부선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함께 2027년 동시개통을 목표로 한 가운데 최근 국가철도공단은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고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평택~제천~삼척 고속도로 구간의 경우, 평택~제천은 2015년 개통됐고 제천~영월 구간은 2020년 기획재정부에 타를 통과, 2025년 착공 및 2031년 개통이 목표다. 영월~삼척 구간 예타 결과는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이다.

김재진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환동해권 새로운 성장동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SOC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전인수·박지은

강원도민일보

2023 12 01 ()

11

학곡지구 초교 '주민 개방형 복합시설' 조성

춘천시·교육당국 신설 합의
체육관·문화공간·돌봄시설 등
2700세대 입주 행정절차 추진

속보=학곡지구 초교 신설 여부를 두고 춘천시와 교육당국의 이견이 장기화(본지 11월 17일자 9면)된 가운데 양측이 '복합시설'로 학교를 짓기로 결정했다. 교육당국과 춘천시가 학곡지구 초교신설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행정절차도 진행될 계획이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와 춘천교육지원청은 이날 시청에서 교육

행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의 쟁점은 학곡지구 초교 신설이다. 학곡지구는 내년 10월부터 모두 2700여 세대가 입주한다. 당초 춘천시는 학곡지구 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비롯해 공공기관과 초등학교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학곡지구 초교 신설은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였다. 교육당국 지침상 학교 신설은 4000세대 이상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다원지구를 비롯해 동내면 일원에 초교 신설 계획만 3곳에 이른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학곡지구 입주를 1년 앞두고도 학교 신설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예비 입주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학곡지구 초교가 지어지지 않으면 학곡지구 거주 학생들은 2.5km 이상 떨어진 성원초교나 동내초교로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양측은 이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학곡지구 초교를 짓되 복합시설로 짓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공간이지만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교육당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연간 40개

교씩 모두 200곳을 학교복합시설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에는 체육관은 물론이고 문화공간, 돌봄시설 등이 들어선다.

춘천시와 춘천교육지원청이 학곡지구 초교 신설에 합의하면서 관련 절차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학교신설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니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공모 계획 등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오세현 tpgus@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12 01 ()

13

강릉 7개 중기 옥계항서 첫 러시아 수출길

시수출협 해외특판행사 성과
향후 미주·동남아 확대 계획
"수출입 가능 무역항 자리매김"

강릉지역 기업체들이 옥계항을 통해 러시아로 처음 컨테이너 수출을 시작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옥계항을 통해 지역 내 7개 기업이 러시아로 수출하는 첫 수출물품을 선적했다.

지난 10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강릉시수출협회(회장 이석재)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옥계항을 이용한 공동수출 창구를 만들기 위해 러시아 현지에서 강릉상품 해외특판 행사를 기



강릉시는 30일 옥계항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하는 첫 수출물품을 선적했다.

획해 지역 내 7개 중소기업의 첫 옥계항 수출이라는 성과를 만들었다.

7개 기업은 신성바이오팜(콜라겐 멀티바이오틱스), 미리내산림(건강 기능식품), 동림푸드(동결건조식품), S&Food(단백질바), 에인미코스메틱(여성청결제), 강릉비앤씨

(초당커피빵), 디에스홈푸드(오징어튀김)이다. 시는 미래 국가산단과 연계한 해양복합물류 중심 경제도시로 성장해 가는 길에 큰 이정표를 남기게 됐다고 자평했다.

옥계항을 통해 러시아에 수출되는 강릉상품은 오는 12월 10일에 시작해

열흘간 현지유통전시장 내 SHOPIN SHOP 특판행사에 판매될 예정이다.

강릉시수출협회는 첫 러시아 특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향후 동남아시아와 미주 등지로 판로를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18일 컨테이너 국제정기항로 일본노선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국제무역선이 옥계항에 15차례 입항해 1500TEU 이상 컨테이너를 수입하는 성과를 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러시아 첫 수출을 시작으로 옥계항은 수출입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무역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 강릉이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재

강원도민일보

2023 12 01 ()

14

태백형 산림·목재 일자리 모델 개발한다

장성광업소 폐광 대응책 마련
노사민정 실무협·추진단 구성
4일 대토론회·실천협약선언

오는 2024년 6월말로 예정된 태백장성광업소 폐광 대비 일자리 모델 개발이 본격화된다.

태백시는 장성광업소 폐광을 6개월 앞두고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태백형 상생·협력 일자리

모델을 개발한다.

일자리 모델은 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강원남부권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기반으로 개발된다. 산림·목재산업의 첨단스마트화를 통해 청년·중장년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다.

시는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실무협의회(12명)와 숙의·공론화추진단(20명)을 통해 지역의 경쟁 우위에 있는 산지와 산림을 활용한 산림·목재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방

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림·목재클러스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으로 오는 2027년까지 4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권역 단위의 목재생산 체계 및 가공 인프라가 구축된다. 거점 지역인 태백에는 목재종합가공센터가 조성된다.

이와관련, 시는 오는 4일 오투리조트에서 '태백형 산림·목재 상생·협력 일자리 대토론회 및 기초 실천협약선언' 행사를 열고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산림·목재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본격 나선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역 최대 일터인 장성광업소 폐광을 앞둔 어려운 시기이지만 산업단지 및 목재산업 관련 기업들과 함께 시행착오는 줄이고, 강원남부권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모태로 상생·협력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산림·목재 자연자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열

江原日報

2023 12 01 ()

02

영월~삼척 고속도 인근 개발 러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진행 중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주변으로 각종 개발 계획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30일 영월~삼척 고속도로 주변 5개 시·군의 장래 개발 계획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131건의 도시개발(73건) 및 산업단지(26건), 관광단지(23건), 체육시설(9건) 사업이 계획 및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획 면적은 3,200만㎡, 계획 인구는 47만7,000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다.

주변 5개 시·군 총 131건 사업 계획·추진 중
지역 발전 동력 전망... 예타 경제성 향상 기대

주요 사업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동해시는 북평제2일반산업단지(59만㎡), 삼척시는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172만㎡), 영월군 드론테마파크 및 센터 조성사업(5만㎡), 정선군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671만㎡), 태백시 ECO JOB CITY 태백도시재생사업(46만㎡) 등이다.

또 신항 개발과 도시재생뉴딜사

업, 한옥마을 조성사업, 웰니스 향노화산업 등 지역 소멸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계획 등도 포함돼 있다.

강원자치도는 이 같은 시·군 계획이 향후 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예타의 경제성(B/C)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교통수요 유발효과가 큰 40여개 사업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예타 분석에 반영해 줄 것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다양한 개발 계획이 추진되는 만큼 개통 후 많은 경제효과가 있다"면서 "정부에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는 지역 균형발전 촉진 SOC 확충 사업으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신형철기자

江原日報

2023 12 01 ()

01

영하 10도 뚝... 칼바람·한파로 문 여는 12월

내륙·산지에 특보 발효

내일 영서·산간 한때 눈

1일부터 기온이 더욱 떨어져 본격적인 강추위가 시작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지난 30일보다 더욱 하락한 영하 10도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륙과 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일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고, 아침 기온이 강원내륙과 산지는 영하 10도 내외가 돼 춥겠다”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으니 한파 영향예보를 참고해 달라”고 예보했다. 이어 “노약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추위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난방기 사용시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횡성·평창·철원·양구가 영하 10도로 가장 낮겠고, 춘천·홍천·화천·인제도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춥겠다. 원주는 영하 7도, 강릉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도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에 그치겠다.

추위는 토요일인 2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평창과 양구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가장 춥겠고, 춘천 영하 8도, 원주 영하 6도 등 강추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영동지방에서도 속초 영하 2도, 강릉 0도 등을 기록해 춥겠고, 영서 북부지역과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다.

춘천·원주·횡성·영월·태백·정선·철원·화천 등 영서 일부지역과 양구 등 5개 평지, 중부·남부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박서화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2 01 ()

/ 19

동해안 '여행 쓰레기' 장기 대책 필요

-지자체 처리용량 초과, 정부·지자체 해법 찾아야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강원 동해안에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여행 이벤트를 마련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해 대한민국 제1관광지의 위상을 다지고 있습니다. 강원 관광산업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 집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쓰레기양도 증가해 영동권 지자체들이 난감해합니다. 처리용량은 한계에 이르렀고, 예산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늘어날 관광객에 대비한 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쓰레기 처리 부담이 커지는 대표적인 지역은 양양군입니다. '서핑 천국'으로 수도권 관광객의 발길이 몰리는 양양의 경우 연간 발생하는 쓰레기 총량은 1만2000t 수준입니다. 하루 평균 32t의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군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양은 하루 평균 35~40t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지자체의 2배에 달합니다. 관광객이 집중되는 7~8월에는 하루 80t, 휴가철이 절정을 이루는 7월 말~8월 초에는 하루에 150t까지 반입되고 있습니다. 군환경자원센터에서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은 30t이지만 그나마 시설이 노후해 80%정도만 가동합니다. 침출수까지 포함해

하루 21t의 쓰레기를 소각, 쌓여가는 쓰레기가 매일 10~15t에 이릅니다. 10억여원의 예산이 매년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인근 시군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속초시의 관광객 수는 2023년 10월 말 기준 1327만3984명입니다. 이로 인해 쓰레기 매립량은 2023년 10월 말 기준 9740t 수준입니다. 동해안 관광의 중심지인 강릉시는 생활 쓰레기·재활용품·음식물 등 쓰레기 처리량이 2022년 7만446t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6만2989t으로 파악됐습니다. 처리비용으로 올해 10월 말 기준 133억693만여원이 투입됐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 고성군 등 동해안 지자체 모두가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관광은 강원 동해안 시군의 기간산업입니다. 휴가철 성수기를 뛰어넘어 4계절 관광지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때문에 쓰레기 처리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현안입니다. 영동지역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부터 처리 용량 확대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유동 인구를 고려한 정부의 예산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01 ()

/ 19

철도공단 백마고지역 재개 약속 지켜야

-연천군 전철 조기 완공 위해 일시 정지, 신뢰 저버리면 안 돼

철원군과 군의회에서 백마고지역 운행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연천역 복선전철의 빠른 개통 차원에서 소요산~백마고지 구간 여객열차 운행 일시 정지에 철원주민들이 협조했는데, 이달 12월 12일 복선전철 개통을 앞둔 시점인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된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5년째 철원주민들은 이동권 제한 및 관광산업 침체라는 큰 불편과 손실을 감수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도 조기 완공 협조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불만이고 조되고 있습니다.

철원군의회는 지난달 27일 백마고지역 통근열차 운행 재개를 촉구하는 건의문에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측이 철원을 무시하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철원군은 경기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예산 절감 및 공정 단축을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측의 백마고지역 여객열차 일시 중지 제안을 수용했으나, 이후 원상 복구의 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원주민들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책사업의 조기 완공 차원에서 일상적인 불편과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철도기관의 제안에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운행 정지 만료 시점인 21년 2월 말을 넘겨 23년 말 연천군 복선전

철 개통을 앞둔 지금까지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더욱이 복선전철 개통 이후엔 연천군이 철원까지 운영하던 대체 버스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져 철원주민은 이중 어려움에 부딪치게 됐습니다.

백마고지역은 2007~2012년 연장 공사를 통해 2012년 11월부터 통근열차가 운행돼 수도권 관광객 및 접경지 주민 대중교통 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사업으로 운행이 중지된 이후 5년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측은 열차 내구연한 문제를 들고 있으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미온적입니다.

철원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연간 72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도시이며, 수도권 방문객이 78%를 차지할 정도로 이동량이 많습니다. 기존에 운행되던 열차를 재개하지 않는 것은 용납이 어렵습니다. 안보 규제로 묶인 철원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철도교통은 필수입니다. 일상적, 경제적 손실을 보면서 국책사업에 협조한 철원주민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국가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철원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철도교통 불편과 각종 규제 가산을 옥죄는 강원 현안이라는 점에서도 차원에서 힘을 보태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12 01 ()

/ 25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 실질적 대책 강구해야

올 3분기 도내 합계출산율이 0.87명으로 나타나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과 직결되는 혼인 건수도 가장 적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도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7명으로 전년 동분기(0.99명)보다 0.12명 줄었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저였던 올 2분기와 동일한 출산율이다. 2022년 4분기 0.90명에서 올 1분기 1.03명으로 반등한 출산율이 올 2~3분기 연속으로 0.87명에 머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출산율과 직접 연동되는 지표인 혼인 건수 또한 급감했다. 올 3분기 도내 혼인 건수는 1,1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건(-7.4%) 줄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물론 출생아 수 감소는 강원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국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10명 줄었다. 모든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떨어진 셈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혼인 건수 하락뿐만 아니라 혼인 연령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결혼 이후 아이를 출산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후 아이를 낳는 지연 출산 양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자

녀 출산이 늦어질수록 다자녀 출산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혼인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만의 삶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다. 저출생 기조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물론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지역이 발전하고 경제 성장을 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경제활동인구가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 지역사회의 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인구 문제는 지역 소멸 등과도 연동돼 있다.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가 많아져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자칫 때를 놓치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투입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무엇이 아이를 낳지 않는 현실을 초래했는지 잘 따져 보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곳’,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게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최대 현안이다.

江原日報

2023 12 01 ()

/ 25

외국인 근로자 체계적 관리, 더 이상 미뤄선 안돼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업 현장 등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이 없으면 각종 공사 현장은 물론이고 서비스 업종은 운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가 도내 18개 시·군별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인력 수요를 조사한 결과 7,428명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제 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이 취업 가능한 업종에 음식점업, 임업, 광업을 추가하기

로 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다. 이제 외국 인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도내 외국 인력은 올 3분기 기준 3,743명으로 전국 대비 1.6%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넘어가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그렇다 보니 '3D 업종'과 관련된 일들은 이제 외국 인력들의 몫이 돼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세계화(Globalization),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가 진행되면서 더욱 심화됐다. 국가 간에는 인종 및 종교 간의 갈등이 더욱 악화됐고, 내적으로는 빈부의 차가 커져 이로 인해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일할 사람을 못 구해 난처한 지경이다. 강원자치도가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현행 외국 인력 제도는 정주화 금지가 원칙인 단기·비숙련 순환제도다. 하지만 이미 순환제는 정체돼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다시 외국 인력을 채우다 보면 과부하가 걸리게 될 것임은 불 보듯 하다. 외국 인력 제도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에 있어 외국 인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관리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우선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었

**강원특별자치도, 내년 수요조사 결과 7,428명
전년 대비 9.2% 증가, 선제적 대응 절실
처우·환경 개선으로 '부작용' 사전 차단해야**

다.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이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는 대신 임시방편으로 외국 인력을 늘려 일자리 생태계를 흔들어 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국 인력들이 투입되는 곳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이 대부분이다.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은 처음에는 등록 일자리로 취업을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보다 많은 임금을 주는 미등록 일자리로 옮겨 가게 된다. 이는 당연히 불법 취업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일손 부족으로 인한 산업 현장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확대하는 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아울러 마련해 나가야 한다.